

단기연체 기준, '10만원·5일' → '30만원·30일' 완화

[개인신용평가 개선]

금융위,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안 발표
전체 단기연체자 12만 7000명 연체등록 해제
평가과정 공개 확대·신용점수 예측 관리 가능

정부가 금융채무 단기연체 기준을 현행 '10만원·5일' 이상에서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연체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법 부위 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단기연체는 10만원·5영업일 이상 연체시 등록되며, 상환후 3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는데 이를 30만원·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5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되는 장기연체의 경우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높인다. 금융위를 이틀 통해 전체 단기연



체 등록자 123만1800명 중 약 6만 3000명, 장기연체 등록자 94만3000명 중 약 6만4000명에 대해 연체등록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거래 연체는 이력정보 활용을 전면 제한한다. 단 연체 중 티은행의 신규대출 발급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활용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116만15000명이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축소 대상에 해당해 신용점수가 상

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연체 정보의 과도한 활용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연체채주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며 이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를 유도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평가지표 및 과정 전반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고 신용점수의 예측·관리 가능성도 높인다. CB(신용평가)사의 평가항목 공개를 확대하고 설명도 추가해 소비자

가 알기 쉽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 변화를 보다 편리하게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를 계산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개인신용평가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외부 독립위원회도 설치한다. 학계, 금융분야 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 모형, 민원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피드백 채널을 마련한다. 개인신용평가 추이, 점수 변동률

점수대별 연체율 등을 포함한 상세 현황이 담긴 CB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소비자의 적극적 대응권 보장을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한 고객 통지 강화 및 이의제기권 도입 등도 추진한다. 대출이용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및 이의 제기,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방안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등급제, 점수제로 바뀐다...2금융권 대출 불이익 완화

신용점수 하락 방지 위한 평가방식도 개선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점수 하락 폭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법 부위 원장 주재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신용평가의 등급간 질적효과를 완화하고 리스크 평가의 세분화를 위해 CB(신용평가)등급제(1~10등급)를 점수제(1000점 만점)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받게 되지만, 점수제에서는 6등급과 유사하게 취급받아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에 따라 전반적으로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이 갖춰진 대형금융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시범실시한 뒤 내년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실적 등을 활용하지만 민간보험료 납부 정보와 체크카드 실적 등으로 활용 정보 범위를 넓힌다. 특히 우량정보 등록 시 가점폭을 현행 5~17점에서 최대 50점으로 확대한다. 상거래 정보의 연체등록 기준은 현행 3개월·10만원 이상에서 3개월·5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연체정보 외에 상실 납부실적, 장기사용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 금융·비금융정보를 분리해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

용한 독자적 신용점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 금융업권에 따른 평가상 차등도 완화한다. 현재는 대출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데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금융위는 신용위험 평가시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을 반영, 평가체계를 세분화한다는 방침이다.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우량고객의 경우 신용점수의 하락폭을 완화할 수 있다. 단 평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통계 검증 등을 통해 매년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리추정 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당분간 금리대별 위험도를 업권별 위험도와 함께 반영, 점수 하락폭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이용고객의 경우 0% 이하 대출 이용시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 6~18% 이하 중금리 대출 이용시 캐피탈·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자 총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18%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29만명의 신용점수가 약 70점(약 0.9등급) 상승하고, 이중 21만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현행 은행권 수준으로 평가하는 등 업권차등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만명의 점수 상승이 예상되며, 이중 각각 7만 7000명, 5만9000명은 등급이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방안은 올 상반기 금융회사 등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다.

뉴스

지역광고·미케팅·정편지발
湖南新聞
 전인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